

# NEWS & NEWS

News & News

## 구강정책과 반드시 존속돼야 안성모 협회장, 장관 면담시 요청

치협 회장단 등은 지난 5월 30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오는 7월로 예정된 복지부 조직개편에서 구강정책과가 반드시 존속되거나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회장단 등은 또 지난 5월 25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치과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치과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중요정책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신입인사차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과거에 모두 분산돼 있는 구강보건 관련 업무가 어렵게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만약 또 업무가 분산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구강정책과가 조직개편 논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안 협회장은 또 “국민 편에서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려 한다. 무시되거나 없어지고 헤쳐 모여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면서 “치협도 구강정책과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꼭 반영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치과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어떤 직역도 과소평가 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할지 시한을 갖고 고민중이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구 부회장은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의 치아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에 구강보건정책이 누락돼 있고 노인들의 구강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부 빠져 있다. 구강정책과가 분산되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구강정책과를 적극 밀어주면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불우노인 무료 틀니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소개했다.

김성욱 총무이사는 “치과계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인이 7만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구강보건정책은 항상 분산되고 후순위에 밀려왔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치과 특성을 꼭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번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중 치과의료공공정책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자칫 더 후순위로 밀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구강정책과와 협조해 실천 가능한 사업을 많이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면담은 치협 회장단과 김성욱 총무이사, 전민용 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40여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안성모 구강정책과장과 김주심 사무관이 배석했다. 회장단 등은 김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문경태 홍보관리실장도 만나 환담을 나눴다.

News & News

## 건보 허위 청구 신고포상금 확대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 땀 최고 3천만원 지급 복지부 7월부터

치과위생사 등 병·의원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새로 지급된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이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고의가 아닌 단순 기준위반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부공익 신고의 경우 실명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고가 접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보다 확대하겠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과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하고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신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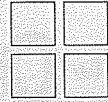
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수사관서에 고소 ▲구체적인 증거자료 요구 등을 통해 음해성, 추측성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 공단, 심판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포상금제도와 병행해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갖고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해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19일 의협, 한의협,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자문회의와 지난 6월 1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치의출신 두번째 장관 발탁” 환경부장관에 이재용씨 환경운동 활발·대구 남구 민선구청장 역임

이재용 대구 덕영치과의원 원장이 새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8일 오후에 있던 일부 개각발표에서 최경기 사퇴서를 제출한 곽결호 장관에 이어 제10대 환경부장관에 전격 기용됐다. 이 원장의 장관 발탁은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계에서는 이번 이 장관의 입각을 축하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의 환경부 장관 임명은 병·의원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규제 완화와 수도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협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두가지 현안 모두 환경부 관할 업무여서 이 장관의 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대구시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환경운동가로 적극 활동해온 이 장관은 활발한 환경운동으로 현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 물망에 올라 있었다. 이 장관은 특히 치과의사로는 최초로 대구 남구에서 민선 구청장을 연임, 갈등조정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이 뛰어나고 대내외 신망이 두터워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환경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002년 대구 광역시장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

마, 40%에 이르는 지지를 받을 정도로 선전했으며,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지역 정세에 막혀 또 한번의 좌절을 겪기도 했다.

이 장관은 대구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는 7년 동안 단 한번의 사소한 비리의혹도 받지 않아 청렴한 구청장이란 칭송까지 받기도 했으며, 퇴폐와의 전쟁을 통해 세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아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함으로써 치과의사 최초의 보건소장을 탄생하게 하는 강한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평소에도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지금까지 지켜온 초심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소외받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에 앞장 서겠다”고 소신을 밝혀왔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지난 1980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이 장관은 민선 구청장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및 대구광역시지부장,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등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무료노인틀니 대상자 “지자체별 배분 골고루 돼야”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민·관 간담회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이하 노인의치사업) 대상자 배정 시 노령 인구의 정확한 추계와 치과의료기관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아래 각 지자체 별로 적정수의 인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인의치사업 중에 일어난 의료사고와 관련 보험료 지급을 위한 예산 책정과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의치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치협 관계자, 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보건지소) 치과위생사 및 공중보건의,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수렴,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간담회가 지난 6월 21일 복지부 중앙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2년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 이후 사업주무부처와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는데서 의미가 깊었다.

이날 참석자 중 일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 “지난 2002년부터 사업이 지속되다보니 현재는 시술을 해야 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 70세 이상에서보단 60~65세 정도 분들에게 시술해 줬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만큼 대상자의 연령층

제한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지역에선 70세 이상 수급자가 없다고 하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각 지역마다 대상자 수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각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배정 시 대상자수 및 각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수 등 객관적 데이터 아래 적정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노인무료의치보철 사업 중 일어난 의료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에 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의치 보수에 따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당노 등 다른 전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인 경우 의료사고에 따른 보험 보장이 안 되면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용구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보철사업은 효과면에서는 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에 앞서 예방 및 사후관리 차원의 잇솔질 관리 교육 등이 보건소 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은 “의료사고 대비 보험예산 책정,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의 중요성 등에 공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